대한민국 청와대

보 도 자 료

임광현 비서실장, 시험 부정행위 방지대책 '속도전' 당부

- 국가시험 준비상황 보고받고, 차질없는 대책 수립 강조 -

청와대「시험 공정성 회복 TF」단장인 임광현 비서실장은 AI 및 첨단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 수립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오늘 모든 수석과 비서관들에게 속도전을 강조했다.

임 비서실장은 총 844건의 부처 관할 시험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고, △허용 물품 외 반입 원천 차단 방안, △시험지 프롬프터와 워터마크 등 AI 활용인식에 대한 답변 차단 방안, △응시 제한 10년 등 부정행위 처벌 기준 상향에 대한 입법 추진, △시험 자료 사후 검증을 위한 보존 기한 5년 연장과 △디지털 방식의 보존 방안 등 실효적인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임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모든 수석과 비서관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

첫째, 청와대「시험 공정성 회복 TF」와 부처의「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TF」는 효율적 협업으로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낼 것. 청와대 TF는 부처 TF의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 △예산-조직-입법 문제,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면, 청와대 TF에서 즉시 논의해 해결할 것.

둘째, 부정행위자 적발, 제도적-기술적 정비, 부정행위 처벌과 제재 수위 강화 등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대책들을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국민의 제안과 온-오프라인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지적 등을 경청하고 의미있는 아이디어를 대책에 포함할 것.

셋째, 중장기적 과제로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기존 시험 평가 방식,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연구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것.

넷째, AI 및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고 기술 발전에 따라 대응도 달라져야 하는 만큼 향후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 <끝>